

# 민주당 '당 혁신기구' 8월말 구성키로

위원장에 최재성 내정  
당헌·당규 개정 여부  
지도체제 개편 관심  
적폐청산 특위도 구성  
위원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이 8월 하순께 당 혁신기구를 만들고 '100년 정당' 구성을 위한 당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기구 위원장에는 3선의 최재성 전 의원이 내정됐다.

추 대표의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정당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국민적 힘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당세의 확장, 당의 체력 확장, 체질 강화를 하겠다"고 혁신기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만 내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이 힘을 합쳐주세요"라는 호소다. 그래서 100만 권리당원을 우선 목표로 세웠다"고 언급했다.

추 대표는 최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한 데 대해 "3선 경험이 있는 중진의원으로서 (문재인 당대표 시절) 안철수 의원 탈당, 박지원 의원 등 중진급 탈당으로 위기일 때 권리당원 가입을 호소해서 많이 들어오게 했다"며 "외연 확대에 대해서는 나름의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당의 외연확대에 대한 책임자라 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을 정기국회에 의원은 몰두하실 일이 많다"며 "(최 전 의원이)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스럽다"고 강조했다.



전임정부 미이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청와대 민원실에서 전임정부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상자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최 전 의원의 내정 사실을 최고위원에게 알렸다. 혁신위 출범에는 추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추 대표와 가까운 김민석 민주연구원장과 최 전 의원이 혁신기구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추 대표는 당초 자신의 휴가(7월31일~8월 4일) 이후 혁신기구 구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뉴시스 보도 이후 공개 시기를 앞당겼다. 혁신기구 출범은 추 대표와 최고위원의 휴가 직후인 8월 하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관심은 당헌·당규 개정 여부와 현행 지도체제 개편으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당헌상 공직선거 1년 전까지 경선물을 확정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10개월여 남긴 현시점까지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이에 자연스럽게 당헌 개정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추 대표는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그런 논의까지 당원이 할 수 있으면 좋다"며 "이 안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론은 없다"고 답했다. 현행 지도체제와 당 조직개편 가능성도

접지된다. 우선 현재 시·도당위원장이 호선을 거쳐 최고위원으로 합류하는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석 원장은 뉴시스의 통화에서 "지도체제 개편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주된 과제로 해서 혁신위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혁신위가 만들어져서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18일께 최고위에서 당내 적폐청산 특위 출범을 의결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박범계 최고위원이 맡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뉴시스

## 천정배, 8월1일 국민의당 대표 출마 선언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천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날 출마선언을 통해 '소통'과 '협치'를 통한 당 정비와 당의 진로, 정체성에 대한 비전 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당 대표가 된다면 당의 내부소통을 강화하고 일사불란한 체제로 당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천 의원은 지난 28일 강원도당과 대전시당 방문에 이어 27일 울산과 대구, 울산, 충남 등을 돌며 주요 시도당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당내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다.

천 의원은 "국민의당은 8·27전대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당 진로나 정체성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과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저의 모든 정치생명을 걸고 당이 위기를 이겨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靑 "공론화위 결정 따른다는 원칙 변한 적 없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사재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것 관련 "공론화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을 내든 그것에 대해 100% 수용해서 따르겠다는 원칙은 단 한 번도 변하거나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론화위 관련 성격과 역할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그렇기에 언론에서도 공론화위가 어떤지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중립적인 공론화위가 구성되는 1단계까지 관여하는 것이다. 어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 전체 의견으로 어떠한 틀을 선정하고 틀을 설정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시민 배심원제란 말도 정해진 단어가 아니다"면서 "공론화위를 단순히 국민 여론조사나 세밀하게 설계된 여론조사로 이해하거나 공론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끼리 '찬성 또는 반대' 손들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는데 초기 과정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한국당 혁신위, 차 출당 등 선언문 합의 도출 실패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8일 예정했던 당 혁신의 당위성, 목표, 철학 등을 담은 '혁신선언문' 발표를 전격 취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 등 선언문에 담길 내용을 두고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모양새다.

혁신위는 당초 이날 오전 9시30분 혁신선언문을 발표한 뒤 오전 10시 비공개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발표 시간 40분 전인 오전 8시50분께 일정이 취소됐으며 오전 10시부터 1시간 이상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이낙남 혁신위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된 선언문은 쟁점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며 "어제 자정을 넘겨서까지 쟁점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지만 결국 위원들 간 좀 더 합의가 도출된 이후 발표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모아져 갑자기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와 이념을 명확하게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현장 중심의 경제로 다가가려 할 건지 이런 여러 쟁점이 있었다"고 말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인식 개선 부분에 있어 탄핵 문제를 우리가 전혀 논의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며 "오늘 중엔 (결론내기) 힘들 것 같고 좀 더 논의를 거쳐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사드 최종배치, 일반환경영향평가 반영해 결정"

### 국방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민주적 절차성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어"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 측에 공여기로 한 성주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주장했던 국방부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6월7일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협의해 왔고, TF의 건의 및 최근 상황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며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국방부가 주장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없고 기간도 짧아 보통 6개월 안팎으로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를 마친 뒤 설명회 등을 통해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때문에 대략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린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걸리는 기간은 중간에 협의회 구성, 주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정 등의 편차가 있지만 대략 10~15개월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기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입장전환을 한

것과 관련 "정부의 기본입장은 사드배치를 철회하거나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사드배치 절차상 정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고 민주적 참여를 모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최종 배치 결정을 하는 것은 투명성, 민주적 절차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며 "때문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배치를)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계자는 일반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해 "작년부터 잠정적으로 전체부지가 약 70만㎡라고 실무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1차 공여면적인 32만㎡과 미측과 합의후 결정될 2차 부지 공여면적을 대상으로 모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 백두대간 역사관
- 3D 애니메트로닉스관
- 어드벤처 라이더관
-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